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8.31(화) 본 브리핑시	배포일시	2021. 8. 27.(금) 09:00
담당과장	예산실 예산총괄과장 박창환 (044-215-7110)	담당자	박상우 사무관(tobby1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장 김태곤 (044-215-7130)		최상구 사무관(sanggu_choi@korea.kr) 하치승 사무관(hcs017@korea.kr)
	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(044-215-5720)		김영은 사무관(bestinme@korea.kr) 이수지 사무관(suzylee@korea.kr)

제목: 강한 경제, 민생 버팀목 「2022년 예산안」 및 「2021~2025 국가재정운용계획」 발표

- 전년대비 8.3% 증가한 604.4조원 확장재정 편성 -
- 재정적자 20조원 축소로 건전재정 회복기반 마련 -

□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“회복”,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“상생”, 경제·사회의 한 단계 “도약”을 견인하기 위한 「2022년도 예산안」을 마련하였음

- 내년 예산안은 ①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, ②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, ③탄소중립·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, ④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중점으로 구성

□ 「2022년 예산안」과 「2021~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은 8.31(화)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.3(금) 국회에 제출될 계획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

첨부 1~5. (2022년 예산안) ①주요내용, ②2022년 예산안,
③현장공감예산 20선, ④이색사업 20선, ⑤인포그래픽
6~7. (2021-2025 국가재정운용계획) ⑥상세내용, ⑦인포그래픽

I 2022년 예산안

1. 예산안의 전체 모습

1] 604.4조원 확장재정 편성(+8.3%), 재정적자는 20조원 축소

- 정부는 '22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.3% 늘어난 604.4조원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음
-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(△55.6조원)가 '21년 본예산(△75.4조원) 대비 +19.8조원 개선, '21년 추경(△90.3조원) 대비로는 +34.7조원 대폭 개선되고,
 - ※ GDP대비 비중: ('21본) △3.7% → ('21추경) △4.4% → ('22년) △2.6%
- 국가채무 증가폭(+112.3조원)도 '21년 본예산(+150.8조원) 대비 △38.5조원 축소되는 등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(터닝포인트)을 마련
 - ※ 국가채무(순증) : ('21본) +150.8 → ('21추경) +160.1 → ('22년) +112.3조원
일반회계 적자국채: ('21본) 93.5 → ('21추경) 101.4 → ('22년) 77.6조원

(조원, %)	'21		'22안
	본예산	2회 추경	
◇ 총 수 입 (증가율)	482.6 (0.2)	514.6 (6.8)	548.8 (6.7*)
◇ 총 지 출 (증가율)	558.0 (8.9)	604.9 (18.1)	604.4 (8.3)
■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)	△75.4 (△3.7)	△90.3 (△4.4)	△55.6 (△2.6)
■ 국가채무 (GDP대비)	956.0 (47.3)	965.3 (47.3)	1,068.3 (50.2)

* '22년 총수입 증가율은 '21년 2차 추경 대비

2] 방역, 소상공인, 격차완화 등 '해야할 일'에 대한 적극적 재정

- '22년에도 백신·방역,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위기 극복, 코로나 이후의 新양극화 대응과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

- 우선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 불확실성이 계속되어, 충분한 물량의 선제적 백신 확보,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백신·방역 예산은 소요를 아끼지 않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,
 - 방역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크게 증가*하는 등 경영난이 고조되고 있어,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
- * 자영업자 수(통계청) : ('19.2/4) 568만명 → ('21.2/2) 557만명 (△11만명)
- 한편,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 어려움 지속, 교육·돌봄·자산격차 확대 등 경제·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부문별 중층적 지원이 절실
 - 또한 기후정상회의 개최('21.4월) 등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된 탄소중립,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2.0 등 미래대비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점

3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·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현

- 코로나 위기 적극적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,
- * '20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, 우리나라 채무비율(48.7%)은 IMF 선진국 평균(120.1%)의 절반 이하 수준(IMF, '21.4월)
-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재구조화, 세입 기반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도 적극 추진 중
- 더 나아가 '확장재정→ 경제회복→ 세수증대→ 건전성 개선'이라는 「재정의 선순환 구조」가 가시화되는 모습으로,
- 외환위기,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장재정을 통한 조기경제 회복,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실현된 것과 유사한 상황
- * 외환위기시 지출 증가율(%) : ('97)18.8 ('98)15.1 → '99년 실질성장률 11.5%
금융위기시 지출 증가율(%) : ('08)12.6 ('09)13.1 → '10년 실질성장률 6.8%
- 중장기적으로도 통합재정수지 △2% ~ △3% 수준, '25년 국가 채무비율 50% 후반대 유지 등 재정건전성을 지속 관리하겠음

〈 그간 재정정책의 성과 〉

◆ 「확장재정→경제회복→세수증대→건전성 개선」의 **재정의 선순환 구조** 가시화

- **(확장재정)** 코로나 이후 확장적 본예산 및 6차례 추경 등 맞춤형 피해지원*을 통해 직·간접적 성장 제고 및 분배 개선 기여

* ('20.1차) 11.7 (2차) 12.2 (3차) 35.1 (4차) 7.8 ('20.12월 맞춤형 대책) 9.3 ('21.1차) 14.9 (2차) 34.9조원

❶ (직접 경로) 코로나 위기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 소비·투자 지출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정부부문이 성장 보완

* 정부 성장기여도(전년동기비, %p) : ('17) 0.7 ('18) 0.8 ('19) 1.6 ('20.1/4) 2.4 ('20.2/4) 1.3 ('20.3/4) 0.5 ('20.4/4) △0.1 ('21.1/4) 0.0 ('21.2/4) 0.5

❷ (간접 경로) 재난지원금, 소비쿠폰 등을 통해 민간소비 위축 보완 + 취약계층 생계지원,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소득 격차 완충

* 시장소득 5분위 배율: ('20.1/4) 14.77 (2/4) 14.38 (3/4) 13.08 (4/4) 11.85 ('21.1/4) 16.20 (2/4) 12.51
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('20.1/4) 6.89 (2/4) 5.03 (3/4) 5.92 (4/4) 5.78 ('21.1/4) 6.30 (2/4) 5.59

- **(경제회복)** 지난해 주요국 대비 GDP 역성장폭을 최소화, '21.2/4분기까지 회복속도도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고 수준

주요국 '20년 성장률



* 출처 : OECD

글로벌 Top10국 위기직전 대비 '21.2/4 GDP

('19.4/4 = 100, 선진국, 신흥국)

1	미국	100.8	6	인도	89.3
2	중국	108.2	7	프랑스	96.7
3	일본	98.5	8	이탈리아	96.2
4	독일	96.1	9	캐나다	98.9
5	영국	95.6	10	한국	101.3

* '21.2/4 GDP의 경우, 캐나다·인도는 IB 평균 기준

※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*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

* GDP 대비 코로나 재정지원 규모(IMF '21.6월) : G20 평균 9.0%, 우리나라 6.3%(11위)

⇒ OECD, 한국이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 ('21.5월)
 IMF,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 운용 권고 ('20.10월)

- **(세수증대)** 경제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'22년 총수입 크게 증가 ⇒ 548.8조원 (추경대비 +6.7%)

* 총 수입: ('21) 482.6(+0.2%) → ('21.추경) 514.6(+6.8%) → ('22) 548.8조원(추경대비 +6.7%)
 국세수입: ('21) 282.7(△1.0%) → ('21.추경) 314.3(+11.2%) → ('22) 338.6조원(추경대비 +7.8%)

- **(건전재정)**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개선(△3.7%→ △2.6%) 되며, 재정적자 심화 흐름을 반전하는 발판 마련

※ '21년 2차 추경(역대 최대 지출 규모인 34.9조원)은 경제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**국채발행 없이** 편성하고 세수 일부를 활용하여 **2조원 국채 상환**

2. 중점 투자 방향

[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]

④ 일자리 예산 31조원, 일자리 211만개 유지·창출

-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.1 → 31.3조원으로 확대하고, 고용·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하는 한편,
 - 공공·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·유지 등 버팀목 역할도 지속
- 노인·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, 저소득층 자활근로 6.6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 자리를 101→105만개로 확대하고,
 -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, SW 인력 5.9만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

⑤ K-글로벌 백신 허브 0.7조원 … 1조원 규모 펀드도 조성

- K-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'22년 6,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'26년까지 2.2조원을 지원할 계획
 -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·관 합동 'K-글로벌 백신 펀드'에 500억원을 출자하고, 국산백신 1,000만회분 구매(1,920억원), 원부자재·생산공정 R&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임
- 이를 통해 ①'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, ②'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('21년 9위)을 적극 뒷받침

⑥ SOC 예산 28조원 역대 최대, GTX A·B·C 본격 추진

-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.5조원을 투자하고,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,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·첨단화 프로젝트에 20% 이상 확대한 3.4조원을 투자할 계획임
- 한편 수도권 GTX-A·B·C 본격 추진을 위해 0.6조원을 반영함

[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]

⑦ 기준중위소득 5.02% 인상, 아프면 쉴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실시
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'15년 이후 최대치인 5.02% 인상*하는 등 생계·의료·주거 등 7대 급여를 15.0 → 16.4조원으로 확대하고,
*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(4인가구): ('21) 146.3 → ('22) 153.6만원
-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·부상시 최저임금의 60%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
- 또한 '22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 및 임시·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

⑧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완성,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

- 코로나 이후 新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·주거·의료·돌봄·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.9 → 41.3조원으로 확대함
- 서민·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~8구간 지원 단가를 67.5 ~ 368만원 → 350 ~ 390만원으로 인상하고, 저소득 청년 月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,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
- 또한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,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.4%까지 차등 인상

⑨ 한부모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도입,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

- 노인, 장애인, 한부모·다문화 가족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예산을 21.6 → 23.3조원으로 확대
-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%를 신규 도입(+1.4만명)하고,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月10→20만원으로 두 배 인상
- 국가유공자 예우·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보상금을 5% 인상하고, 고령·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10만원,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함

10 소상공인 손실보상 1.8조원 … 맞춤형 재도약 예산도 3배 확대

-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하여,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1.8조원 추가 보장하였음
- 또한 ‘코로나19 위기극복 - 폐업·재기 - 창업·성장’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.1조에서 3.9조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함
 - 만기 도래,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.4조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, 경영위기 업체에는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
 -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新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,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함

11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.6조원, 초광역협력 등 국가균형발전 가속화

-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, 인프라, 지역뉴딜,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.6조원 투자
 - 구체적으로 「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」 年 1조원 신설, 지방교부세(금) 22.7조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장하고,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.1조원 지원
 - 또한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.1조원,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·정착 등을 위해 2.7조원을 지원
 -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(22.1월)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·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 지원

12 농림수산업예산 23조원 … 농지연금 65→60세, 345개 농어촌 활력제고

- 농림·수산·식품 예산은 22.7→23.4조원으로 3.4%* 확대하고 소득안정,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함
 - * '22년 지방이양예산 1,202억원 포함 시 실질 증가율은 3.9%
-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→60세로 완화하는 한편, 농업·수산 공익직불제에 2.4조원을 지원하고
 - 농촌공간정비,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→345개로 확대하여 5,586억원을 투자

[탄소중립 ·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]

13 2050탄소중립 12조원 투자 ... 2.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

-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, 탄소중립기본법(8.24일 법사위 통과)에 따른 NDC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여 11.9조원을 투자하기로 함
 -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,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·산업·모빌리티·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,
 - 내연자동차·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, 사업재편기업 5,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
 - 녹색금융 7.6조원 공급, 탄소포집기술(CCUS) 기술개발 등 금융·R&D·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함
- 또한 2.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병행하기로 함

14 한국판 뉴딜 2.0 33.7조원 투자,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.1조원

- 디지털·그린뉴딜,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.0 착근을 위해 33.7조원을 투자하고, '25년까지 160조원(지방비·민간 포함시 220조원)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함
-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.3조원,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(25개소),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.3조원, 사람투자·청년대책·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.1조원을 투자할 예정

15 20대 분야 혁신인재 11→ 16만명, 융합형 의사과학자 1천명 육성

-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하여 AI·SW, 시스템 반도체, 우주·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 집중 양성
- LINC 3.0(0.4조원),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(979명) 등 양성

16 전체 R&D 예산 29.8조원(+8.8%), 뉴딜 R&D 2.4→3.6조원(+48.1%)

- 차세대반도체·탄소저감 등 뉴딜2.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&D를 2.4→3.6조원으로 48.1% 대폭 확대 반영하였음
- 백신·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&D를 확대(4,424→5,117억원)하고, BIG3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(2.4→2.8조원)
-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845억원) 개발과 같은 우주·양자·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0.7조원을 반영

[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]

17 백신 9천만회분 구입, 총 1.7억회분 확보 ... 방역예산 5.8조원

- 백신 9천만회분(mRNA 8천만회분+국산 1천만회분) 신규 구매(2.6조원) 및 보관·배송·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.5조원 투자
 -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확대(12세만 접종지원→12~17세로 확대, 18~26세 저소득층 지원)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
-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(약 1만개), 선제적 진단 검사 확대 등 진단·격리·치료의 방역 쏠단계에 1.8조원 지원
 -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(기존4개소+신규1개소)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·장비 확충 지원
- 코로나19 백신 개발, 신·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&D에 0.5조원 투자

18 코로나 블루 대응, 위험기계 전면교체 등 국민안전에 21.8조원 투자

- 자연재해·생명보호·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·3·3 프로젝트* 투자를 20.9→21.8조원으로 확대
 - * (자연재해예방) 풍수해 + 산림재해 + 지진, (국민생명보호) 자살 + 교통사고 + 산재/화재 (생활환경개선) 수질 + 대기질 + 폐기물
 -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3천억원 지원,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천대 전면교체

19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, 친가족 5대 패키지 4.1조원 투자

-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(83개월)에서 8세 미만(95개월)으로 확대하여 돌봄부담 경감(+43만명, 국비 +0.4조원)
- 0-1세 영아수당 月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(1회)을 신규지급하고 3+3 공동육아휴직제*도 신규도입하는 등 친(親)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2.7→ 4.1조원으로 적극 확대

*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

20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 일원화 및 1천억원 이상 지원

-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40% 수준 확대했음
-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월30만원)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 확대하고,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

21 국방예산 55조원 … 국방R&D 5조원, 병장 월급 67.6만원

-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&D 확대(4.3→4.9조원), 교육훈련 과학화(0.1→0.2조원)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.8→ 55.2조원으로 확대
 - 병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.6만원(병장기준), 급식단가는 11,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 : 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.7조원 투자
-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등 전략적 ODA를 3.6→4.0조원으로 확대하고,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,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익증진 외교·통일 투자를 5.7→6.0조원으로 확충

3. 3대 재정 혁신

22 “재량지출의 10% 재구조화”로 예산의 군살 제거

-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재량지출 10% 수준을 구조조정 하여 미래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했음
 - 예컨대 코로나 한시 금융지원·일자리 사업 등을 감액하고, 혁신벤처·창업 경쟁력 강화, 신기술 인력양성 등에 재투자
- 또한 특수활동비 등 공무원 4대 경상경비를 '21예산에 이어 △1.7% 추가 절감하여 고통분담에 동참하고,
 -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(△0.3조원), 61개 출연기관 운영비 절감 등 관행적 보조·출연사업도 강도높게 구조조정함

23 K-글로벌 백신허브 등 다부처 협업예산 12개→ 17개 확대

- K-글로벌 백신허브, 노동·자영업 구조전환, 혁신인재 양성, 우주·항공산업 육성 등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17개 아젠다를 협업예산으로 선정하고 40% 이상 증액 (10→ 14조원)
- 금번 협업예산은 거의 전부처가 참여하여, 공동 과제발굴·기획·집행 등 재정 전 단계의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사·중복을 조정한 재정혁신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기대

24 정책수혜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국민공감예산

- 금번 예산은 수요 현장간담회,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, 분야·권역별 예산협의회 등 생생한 현장의견에 기반하여 편성하였음
 - 학대피해아동 쉼터, 청소년한부모 자립 패키지, 한센인 소록도 병원 장비 교체 등 소외·사각지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됨
 -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, 스마트 지방상수도, 자율주행 실증환경 구축 사업 등도 권역별 예산협의회 논의를 통해 반영
-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수산물 현장검사,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등 국민제안 생활밀착형 참여예산도 확대됨

II 2021~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1. '21~'25년 중기재정 전체 모습

- ◇ 포용적 경제회복, 경제·사회 전환,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재정의 역할 지속
- ◇ 선제적 총량관리·재정혁신을 통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
-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 여건 개선 흐름을 토대로,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·사회 구조 전환 대응 등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'21~'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을 수립하였음
-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,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'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,
- '23년 이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'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
- 이에 따라, 통합재정수지는 '21년 △4%대(2차 추정)에서 '25년 △3%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되고, 국가채무비율은 '25년까지 50%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
- 이는 '20~'24년 계획 보다 통합재정수지는 1.1%p('22~'24년 평균), 국가채무비율은 2.2%p('24년 기준) 개선된 것으로,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*을 준수하는 수준임

* 재정준칙 관리기준: (국가채무비율/60%) × (통합재정수지/△3%) ≤ 1.0

< '21~'25년 중기 재정총량 상세 >

(단위 : 조원, %)	'21년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연평균
	본예산	추경					
◇ 총수입	482.6	514.6	548.8	570.2	593.9	618.5	(4.7*)
○ 국세수입	282.7	314.3	338.6	352.9	367.7	383.1	(5.1**)
◇ 총지출	558.0	604.9	604.4	634.7	663.2	691.1	(5.5)
◇ 통합재정수지	△75.4	△90.3	△55.6	△64.5	△69.4	△72.6	-
(GDP대비, %)	(△3.7)	(△4.4)	(△2.6)	(△2.9)	(△3.0)	(△3.0)	-
◇ 국가채무	956.0	965.3	1,068.3	1,175.4	1,291.5	1,408.5	-
(GDP대비, %)	(47.3)	(47.3)	(50.2)	(53.1)	(56.1)	(58.8)	-

* '21년 추경예산 대비(본예산 대비 6.4%) / ** '21년 추경예산 대비(본예산 대비 7.9%)

2. '21~'25년 재정운용 방향

① 포용적 경제회복과 경제·사회 전환, 인구충격 대응 위한 재정 역할 지속

- 내수·고용 회복 등 경제회복 공고화 및 위기과정에서 확대된 격차(新양극화)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
- 디지털·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선도국가 기반 조성 적극 뒷받침
- 저출산·고령화,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

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① (사회 분야) 코로나19 위기 및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·고용·교육 등 안전망 투자를 확대
 -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속 이행해 나가면서,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
 -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, 주거급여 보장성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·주거기반 확충 및 친(親)가족 5대 패키지 지원 등 저출산·고령화 대응 강화
 - 고교무상교육,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
- ② (경제 분야) 한국판 뉴딜,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선도국가 전환을 뒷받침하고, 국가균형발전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
 - 반도체, BIG3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, 맞춤형 지원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가속화
 - 미래차 등 신산업, 소부장 자립화,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R&D의 성과 가시화에 주력
 -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,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스마트시티 보급·확산을 적극 지원
- ③ (행정 분야) 스마트 강군 육성, 국가방역 기반체계 강화,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
 -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핵심무기체계를 자립화하고, 군장병 교육·훈련 과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을 중점 지원
 -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낙후·소외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

2 총량관리 강화 및 선제적 위험대응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

- 불요불급한 비과세·감면 정비, 악의적 체납 등 탈루소득 관리 강화, 유휴 국유지 매각, 배당수입 확대 등 수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
- 경제·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, 저성과·부진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, 협업예산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산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
- 경제회복 추세에 맞추어 지출증가속도를 조절하고, 재정준칙 법제화,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추진 등 재정위험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선

3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·민주성 제고

- 칸막이식 재정지원체계를 일원화(아동학대 대응 등)하고, 기후대응기금·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·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정제도 개편
- 미래지향적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,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여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·활용
- 혁신성장·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및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기반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
-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에 기반한 재정운용 추진
-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결산보고서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